

국민의당 “손학규 오라” 공개 구애

당분간 박지원 원톱체제 외부인사 영입 지속 추진 이번주 비대위 1차 인선

국민의당은 당분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톱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외부인사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영입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난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및 3선 이상 중진 연석회의에서 당내 일각의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론에 대해 “일단은 나에게 맡겨달라”며 “당의 골격을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현재의 겸직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주 대변인이 3일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당의 골격이 마련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겸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한 “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손 전 고문을 포함해 외부인사에 대한 영입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내주 초까지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당내 인사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일단 구성, 당의 골격을 갖추는 작업을 마무리한 뒤 2단계로 외부인사로 비대위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비대위 및 중진 의원들이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조만간 소집하는 한편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도 구성해 당 시스템화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손 전 고문에게 보내는



“손학규, 복귀해 주세요” 국민의당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입을 공식화한 지난 1일 오후 손 전 고문이 참가하는 전남 강진군 백련사 인근에 지지자들이 방문해 정계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애의 목소리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박 비대위원장이 주로 인터뷰 등을 통해 꾸준히 ‘리브풀’을 보내왔으나, 이제는 공식회의의 석상에서까지 정계복귀를 앞둔 손 전 고문의 영입론을 구체화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외부 인사 영입을 주장하면서 손 전 고문의 영입 필요성을 거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의당은 열린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손 전 고문을 포함해 많은 외부인사에 대한 영입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손학규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

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남 라디오에 출연해 “더민주에는 문재인이라는 분이 계시니 손 전 고문이 우리 당으로 와서 경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공개적으로 손 전 고문 영입론을 거듭했다. 손 전 고문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김 의장은 SBS 라디오에서 “기존 양당 체제를 극복하는 정치 혁명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손 전 고문은 그러한 에너지를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전 고문이 합리적인 진보, 합리적 보수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인 노선을 갖고 있

다”면서 “아마 안 전 대표도 우리 당에 좋은 분이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당 지도부가 지 나서 손 전 고문 영입론을 공식화하고 나온 것은 안 전 대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당 혼란상을 수습해 나가고 있지만 당의 대표 브랜드인 ‘안철수’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도 이미지가 강한 손 전 고문을 영입하게 되면 합리적 보수층을 끌어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관측이다. /박지경기자jkipark@

더민주 지역위원장 오늘 심사결과 발표

서영교 의원 여파 윤리 기준 강화...물갈이 폭 커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의 ‘보좌관 가족 채용’ 여파로 지역위원장 심사에서 윤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후보들의 인지도나 정치경력보다 도덕성이 우선시되면서 지역위원장 ‘물갈이 폭’도 예초 예상보다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 의원의 논란으로 촉발된 인적쇄신의 흐름이 당내 역학구조 변화로 이어져 향후 당권·대권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민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3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4일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강특위는 일부 지역에는 단수후보를 추천하고, 일부 지역은 경선지역으

로 정해 복수 후보를 추천한다. 추천명단은 조만간 열리는 당무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강특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한 달간 전국 251개 지역위원회 364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심사 막바지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조강특위는 도덕성 기준을 한층 강화해 후보들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3일 “조강특위 위원들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윤주운전이나 강력범죄, 파렴치범죄 경력 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ipark@

더민주·국민의당 “이정현 청문회 열어야”

여야, KBS 세월호 보도 개입 공방...새누리 “할 일 했을 뿐”

여야는 3일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이 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과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새누리당은 이 전 수석이 당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보도 정정을 요구하는 등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가 후퇴한 총괄적 사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야당은 사안만 터지면 청문회 타령을 한다. ‘청문회 지상주의’ 아니냐”

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사를 빠리는 위압적인 전화를 통상업무라고 말하는 인식은 언론 자유에 대해 너무나 후퇴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김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ipark@

새누리, 전대를 놓고 계파간 수싸움

지도체제 개편·모바일 투표 도입 쟁점...6일 의총서 결정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8·9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각 계파별 수싸움이 치열하다. 계파별로 확실한 후보가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대 물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따라 향후 경쟁 구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의 핵심 쟁점인 지도체제 개편과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전대부터 지도체제 개편을 위한 1인 1표제 도입을 예고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아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당내 최대 계

파인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당권 도전자가 난립해 있는 친박에게 1인 1표제는 표 분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대 투표를 향상과 흥행을 위해 도입하지는 모바일 투표를 놓고도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대리투표 등 부정 시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지만 친박계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물 개정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계파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계가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전국위원회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경기자 jkipark@

추경예산 편성·조선 구조조정...대정부질문 ‘지뢰밭’

4~5일 경제·비경제 분야...청문회 추가 실시 협상

여야는 4~6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일정을 소화한다.

우선, 4일(경제분야)과 5일(비경제분야)에는 대정부질문이 20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된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19대 국회까지는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나 지난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20대 때부터는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이틀간 실시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영국의 유

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경제 충격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해운·조선 산업 구조조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 전관예우 논란 및 범조비리 등 대내외 현안이 많아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브렉시트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발권

력이 동원되는 게 적절함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과 관계부처 장관들의 논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문제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경제부문에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사 간부의 전화통화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가슴기 살균제 피해, 범조비리 사건, 북한의 최근 동향 등도 주된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지난 19대 국회까지 대정부 질문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으나 이번에는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개 분야로 통합한다. 현안이 산적해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무쟁점법안들이 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청문회 실시 문제를 놓고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개최를 합의한 청문회는 가슴기살균제 관련 한 건 뿐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